

여야, 내년도 예산안 놓고 공방만... 강대강 대치

與 “감액안 사과·철회없이 협상 없다”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증액 위한 꼼수”
野 “민생·경제 회생 증액안 가져와야”
“합의 불발시 10일 단독 처리” 압박

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을 계속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협상은 없다고 재차 밝히는데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전향적인 ‘증액 예산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감

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2조를 증액하기 위한 정부여당 겁박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초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 하더니,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했다. 확장 재정이 필요하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물염치한 연기를 했다”며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을 두고도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활비·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일도 당도 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오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2일) 민주당의 감액안 때문에 경제 리스크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총 감액 규모 4조1000

억원은 정부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감액분의) 절반 이상이 사용처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들도 민생·기업·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 “민생이 포함된 사업 예산 24조 원을 뭉텅이로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것이 민생 경제 예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즐기

치게 요구한 6대 민생 미래 예산에 대한 증액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정부다. 지역 화폐, 고교무상교육,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등 민생 예산에 하나같이 반대해 왔다”며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니 부득불 예정위가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될 경우, 우원식 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10일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과 정부측, 여당이 (민주당에)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면서 10일 단독 예산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조국 대표, 6일 광주서 ‘탄핵다방’ 8호점 운영

조국혁신당은 조국(사진) 대표가 6일 오후 5시30분에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탄핵다방’ 8호점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대구에서 시작한 탄핵다방은 목포, 서울, 전주, 대전, 제주, 김해 등 전국을 순회하며 한 달여 간 운영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다방을 통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차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군계이트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또 검찰개혁 4법, 디페이크 차단 6법,



지역살리기 5법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서양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혁신당은 가장 먼저 주저 없이 탄핵의 문을 열고 있다”며 “이번 광주 탄핵다방에는 시민과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미정 시의원 “시, 저출생 대응 위해 예산 증액해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내년도 광주시 저출생 대책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사진) 광주시의원은 지난 2일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아동수당 등 저출생 예산이 감소했다. 광주시가 넓은 정책적 시각을 가지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2024년 대비 ‘아동수당 78억원’, ‘첫만남이용권 28억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12억원’, ‘난자동결기술비 지원 2000만원’ 등 163억원이 감소했다.

임신초기·첫째아이부터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광주시는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지원금’으로 내년 1월1일 출생신고 기준 출생가정에 50만원의 상생카드를 지원한다. 다테아 경우출생아수에 따라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박 의원은 “아이 출산에만 수백에서 수천만원 드는 나라에서 둘째 셋째 포기는 어찌하면 당연한 일”이라며 “경제적 부담과 양육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구 및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반 여건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현 기자

김나운 시의원 “광주 공연마루 상설공연 폐지 우려”

광주시가 내년 광주공연마루 상설공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폐지 우려가 제기됐다.

김나운(사진) 광주시의원은 3일 열린 내년도 광주시 본예산안 심의에서 “상무지구 공연마루에서 해오던 상설공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해 온 상설공연을 대책 없이 폐지하는 것은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2월 첫 선을 보인 상설공연은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와 민간예술단체 등이 참여해 매주 토·일요일 광주공연마루에서 관객을 만나 왔다. 올해 107회



무료 공연을 진행하며, 10월 기준 1만1720명의 관객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상설공연 운영비로 2023년 25억 5400만원, 2024년 11억1400만원을 편성했지만 2025년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업 폐지 결정 전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 어떠한 시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문화도시로서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 등 여당 위원들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안건 가결 반대를 표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 ‘검사 집단행동 감사요구안’ 野 주도 의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與 “이재명 오더냐” 반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요구의 주된 이유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한 바 있다.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감사요구안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50여분 동안 날 선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의견 개진만으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재명의 오더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 허가가 있을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법률비서관 출신’ 주진우, 채상병 국정조사위원회 부적합”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몫 채상병 국정조사위원으로 내정된 주진우 의원에 대해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문제적 언행을 보여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채상병 국정조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주 의원은 스스로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민의힘은 위원을 바로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조사위원들은 주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재직 당시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과 유선전화(02-800-7070)를 통해 소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주 의원은 ‘1년 전에 44초 통화한 것을 기억할 수 없다’며 회피까지 했다고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주 의원은 국정조사위원 직을 내려놓고, 필요시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민의힘 또한 사건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조사위원을 즉시 교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채상병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이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에 공감한다”며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